

# 국익과 북핵보도

최영재 · 홍성구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

## ◆ 논문 요약 ◆

2006년 10월 9일 발발한 소위 '북핵 위기'는 한국 언론의 정파적 편향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국가위기 특히 국가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위기상황에서는 국가위기 해결을 위해 담론투쟁의 양식이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작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같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위기 해결 방안을 놓고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주체들이 더욱 극렬한 대립을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가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 연구는 진보와 보수 혹은 친정부와 반정부로 나뉘어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공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핵 사태를 놓고, 국익을 둘러싼 담론투쟁이 어떤 지형에서 벌어졌는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은 정파적 편향성의 측면에서 양 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할 수 있듯이 보수와 진보로 나뉜 두 신문은 북핵문제에 관한 국익의 정의부터 달랐다. 보수 조선일보는 "북한 제

제"와 "한미동맹 강화"를 국익과 연결시켰고, 진보적인 한겨레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핵실험을 감행한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북한인데도, 북핵사태의 원인을 두 신문은 2차적이거나 또는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남한정부 또는 미국에서 찾으려 했다. 이처럼 북한문제라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 신문 국익보도가 현격하게 다른 것은 한국 언론이 민주화 이후 오히려 정치권력화 과정을 거쳐 정파적 편향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연구는 분석했다.

북핵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부의 위험 요소로 인해 국내 구성원들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해묵은 사회 내 정파적 균열과 정부와 언론의 적대적 관계는 오래지 않아 외부의 충격으로 촉발된 내부 갈등을 더욱 끌고 혼란스런 갈등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치권력의 리더십도 문제이지만, 언론의 정파적 편향과 공격 보도는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켜 국익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주제어: 국익, 북핵, 언론의 정파성,  
담론투쟁, 국가권력, 헤게모니

## I. 문제 제기

한국 사회는 좋은 싫든 80년대말 민주화 이전에는 나름대로 국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반공, 경제발전, 국민화합 과 같은 큰 국가적 슬로건 아래서 그것이 국익과 직결된다는데 대해 커다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같은 국익 이데올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던 독재체제도 국익에 대한 논란이 수면 하로 숨어 있게 만든 큰 원인이 되었다.

어찌됐든, 80년대말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진보세력이 집권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 진보 언론이 크게 약진하면서 지금까지 합의된 것처럼 보여졌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 됐다.

반공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 협력의 미덕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평등한 분배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없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민화합에 대해서도 겉으로만 화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사 규명과 같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적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대안적 사고가 꽃피우기 시작한 것이다.<sup>1)</sup>

모든 국민이 같이 사고 할 수 있는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다원화되고 논쟁을 겪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논쟁도 치열해지게 됐다. 나아가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국익 증대 방안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은 민주화가 진행되고,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세력으로 교체 되는 과정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친정부 언론과 반정부 언론으로 나뉘지면서 언론은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보도하는 방향이 달랐다. 언론 마다 국익에 대한 정의가 달리 나타나기 시작했고, 국익을 정의하는 바에 따라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이합집산 형태도 달리 나타났고, 언론 마다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도 달랐다.

국익 개념은 사실보도와 또는 진실보도와 같은 언론의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종종 상충됨으로써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치권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진실 보도와 관

1) 한국사회의 지배 담론은 1987년 사회 민주화를 기점으로 매우 동태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권위주의 정치 시대의 공고하기만 하던 근대화와 반공주의 지배담론이 지배담론으로서 지위가 약화 혹은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치 시대의 저항담론이었던 민주주의 담론이 지배 담론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했다. 특히 민주주의 담론은 저항담론이 존재하지 않은 일종의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지배 담론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조희연 편, 2003).

련된 언론의 자유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언론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근거로 한 진실 보도의 우위를 고수하려 한다. 진실 보도의 중요성은 진실을 보도해야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던 도움이 되지 않던 보도해야 한다는 진실보도 우선의 원칙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국익과 진실보도 논쟁에서 전제로 하는 국익은 절대적인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고정된 개념으로 간주함으로써 논의의 현실성을 떨어뜨린다. 국익 담론을 독점하고 통제하던 정치권력이 약화되고 민주화 논리가 팽배해지는 지점에서, 더욱이 한국 언론처럼 정파적인 속성에 따라 상호 '언론전쟁' (강명구, 2004)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국익"은 누가 정의하고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기 십상이다. 국익은 더 이상 타자에 의해 고정 개념으로 주어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회 내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의 담론 투쟁의 대상이 되는 복수명사가 된다.

2006년 10월 9일 발발한 소위 '복핵 위기'는 한국 언론의 이와 같은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국가위기 특히 국가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위기상황에서는 국가위기 해결을 위해 담론투쟁의 양식이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작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같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위기 해결 방안을 놓고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주체들이 더욱 극렬한 대립을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가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 연구는 진보와 보수 혹은 친정부와 반정부로 나뉘어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공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복핵 사태를 놓고, 국익을 둘러싼 담론투쟁이 어떤 지형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Ⅱ. 국익과 언론

국가와 언론의 관계는 거시적 차원의 언론학 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다. 언론이 스스로를 권력의 감시견이나 입법, 사법, 행정에 뒤를 잇는 제4부로 묘사하기를 즐기지만, 때로는 국가권력에 동원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국가를 공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와 언론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도출하고 있는 지극히 일반화된 결론 중에 하나는 대외적인 대규모 국가위기 발생 시 언론은 국익을 정당화하는 보도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혈먼과 촘스키(Herman & Chomsky)의 미디어 선전 모델은 평상시의 미국 주류 미디어들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전

쟁과 같은 국가위기 시에는 국가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가공동체 이익 보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주장한다.

블로치와 레만-윌지그(Bloch & Lehman-Wilzig)는 매스미디어가 갖는 역할을 경험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험적 접근은 매스미디어를 정부 행위의 독립적인 '감시견으로' 간주한다. 규범적 접근은 미디어의 역할을 국기 주위로의 결집인 동시에 위기를 처리하는 정부의 정책과 결정에 대한 지지이다. '동원'으로 범주화된 규범적 접근은 위기 시에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권력 집단을 옹호하는 교량으로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한다(주).

주류미디어가 정부의 대외정책을 따르고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은 베넷(Bennett, 1990)이 제기한 인덱싱 가설(indexing hypothesi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는 매스미디어는 어떤 이슈에 대한 정부의 논쟁에 표출된 의견의 범위에 따라 목소리를 낸다고 주장했다. 즉, 의회나 대통령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자 간에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정치적 분열이 생기면 뉴스 미디어는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할린(Hallin)의 베트남전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널리스트는 정치적 조직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고 지배적인 정치적 관점을 옹호하며 정치관료의 관점을 마치 전체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견인 양 전달한다. 반면 정치적 갈등 상황에선 권력통제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관료를 보다 잘 견제하게 된다(주).

이와 같은 시각은 1970년대 영국의 모라토리엄 당시 언론현상을 분석한 홀(Hall, 1978)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홀은 언론이 '특정 행위나 사건에 대한 의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규정', '반대세력에 대한 규정', '특정 이슈와 다른 문제를 연결 혹은 동일시', '갈등의 사회적 관용의 범위 혹은 경계 설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더욱 어려운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에 대한 예언' 등을 통해 국가위기의 의미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한다(1978, pp.223-226).

결국 국가와 언론의 관계는 국익 혹은 국가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또는 국가가 이와 같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상황에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이와 같은 역할은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단순히 정부, 의회, 입법부, 검찰, 경찰 등과 같은 국가부문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Jessop, 1981).<sup>2)</sup> 국가의 권력 사용을 정당화하

2) 제습(Jessop)의 국가이론은 전략적 관계이론(strategic-relational approach)으로 불린다.

는 핵심요소로서 국가이익은 국가의 공식담론과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담론이 서로 접합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국가의 정당성은 국가이익과 행위를 사회의 이익과 행동에 연관시킴으로써 획득된다. 국가이성은 항상 공적이익 또는 국민이익에 대한 주장과 관련되어왔다. ...따라서 정치적 담론은, 다양한 담론을 접합할 수 있는 잠재성을 수반하는 상호담론성이라는 일반적 현상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을 넘어서는 쟁점을 만드는 자신의 특수한 유인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공식적 담론은 결코 자기 충족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 밖의 세력들에 의한 탈구 및 교란에 항상 노출되어있다(Jessop, 1990, 502-503쪽).

이와 같은 국가 권력을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규정할 때, 국익을 둘러싼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담론투쟁의 양식은 이데올로기적 영역을 개방하고, 설득과 논쟁의 과정에서 상대의 담론으로부터 제 요소를 흡수, 전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서로간의 차이를 중성화시키는 '방해의 양식' (mode of interruption)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해석(interpretation)의 양식은 하나의 폐쇄적인 이데올로기 총체 속에 상이한 요소들의 귀속적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대립적이고 적대적 담론들 간의 의미 있는 논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Jessop, 1982, 192-197). '해석의 양식'은 지배 담론이 저항 담론을 완전히 억압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방해의 양식'은 지배담론이 저항담론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홍성구, 2004).

이때 언론은 국가와 사회세력들 간의 형성된 담론투쟁의 지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은 국가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 사회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혹은 국가와 사회세력들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매개하는 사회 세력들 간의 담론투쟁의 양상을 통해서 국가권력 행사의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언론에 매개되는 국익을 둘러싼 담론투쟁이 해석의 양식에 입각해 있을 때에는 방해의 양식에 입각해있을 때보다 국가권력의 집행이 덜 용이해지게 되고,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소극적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다.

노무현 정권 집권 이래 한국사회의 담론투쟁 상황은 철저하게 해석적 양식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왔다. 거의 모든 정치적 이슈들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적대시하는 갈등구조를 형성해온 것이다. 헤게모니 블록 내부의 갈등과 분열은 언론이 보다

---

전략적 관계이론에서 국가는 사회세력들이 투쟁하는 장소로서 이들의 타산적인 전략이 행사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전략의 발생지인 동시에 전략의 산물이다. 이때에 국가권력이란 국가 기구 내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의 힘을 가리킨다(강민, 김옥경, 2003).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보도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지만,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헤게모니 블록 내부의 갈등과 언론사들의 편향전략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또 다른 위기 상황을 창출하고 있다.<sup>3)</sup>

### Ⅲ.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익을 매개로 하여 북핵과 관련된 담론투쟁이 어떠한 지형 속에서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신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파적 편향성의 측면에서 양 극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였으며, 북한 관련 사설을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자료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전문 검색 홈페이지(www.kinds.or.kr)를 통해 수집했다. 분석자료는 조선일보 75건, 한겨레신문 50건으로 이 시기에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사설이 월등하게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Ⅳ. 분석결과

#### 1. 북핵사태 발발 이전의 담론투쟁 양상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북핵사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FTA 등 미국과 관련된 군사, 외교적 이슈들 속에서 분출되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핵위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슈였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해 조선일보는 반대의 입장을 한겨레신문은 찬성

3) 이 같은 사실은 적대적 매체 지각 가설과 메신저 죽이기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적대적 매체 지각은 사람들은 언론이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사실이나 의견을 보도할 때 실제 보도 내용보다 더욱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실이나 의견을 접할 때 어느새 반대되는 의견을 보도한 메신저, 즉 언론을 공격하게 되는 메신저 죽이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적대적 매체 지각에 관한 한 국내 연구는 언론 이용자들이 언론의 내용을 비판하기 보다는 메신저인 언론에 적대감을 가지는 전령 죽이기 현상을 보고했다(오택섭·박성희 2005).

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조선일보의 논조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그 자체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9월 1일, 2일 사설에서 연이어 대통령 및 대통령, 국방·외교장관, 안보수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9월 1일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지를 폈다. 이어 9월 2일 사설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외교장관, 안보수석을 모두 정신차리지 못하는 인사들로 묘사하고 있다.

… 전작권을 서둘러 단독 행사하면 나라 안보가 위험해지는데 대통령은 걱정할 것 없다고 하고, 한·미관계는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는데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국민은 먹고 살기가 힘든데 대통령은 경제는 정상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데서 이 나라의 불행이 비롯되고 있다(조선일보, 2006. 9. 1).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내에서도 시각의 일치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 김대중 정부 때 재입했던 황원탁 전 외교안보수석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바탕인 한·미동맹에 언짢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작권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06. 9. 1).

…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전제를 다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남북관계 하나만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나도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정신에 따라 안보쯤은 거덜나도 된다는 식이다. 이제 전작권 환수로 시동을 걸었으니 국가보안법 철폐, 북방한계선(NLL) 再設定설정, 주한미군 철수 같은 북한의 다른 요구조건들도 차례차례 갖다 바칠 셈인가(조선일보, 2006. 9. 2).

노무현 정권의 첫 국방장관을 지낸 曹永吉조영길 前전 장관은 4일 “연합 전시 작전통제권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先制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체제”라고 말하고 “한국이나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는 이 체제가 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미 공동행사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1994년 北核북핵 위기 때 미국은 대북 군사체제를 결정, 주한미군에 추가전력이 증원되고 한반도 주변 海域해역에 美미 해군력이 증강 배치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작전권의 공동행사자인 한국의 반대로 미국의 일방적 공격이 어려워지고 美미·北북 타협의 길이 열렸다”는 實例사례를 들었다(조선일보, 2006. 9. 5).

연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와는 다르게 한겨레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9월 16일자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은 6자회담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한미 두 정부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하여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합리적 태도다. 이 문제를 두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질서있게 협의가 이뤄진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언급이기도 하다. 국내 일부 보수세력도 이제 작통권 환수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순조로운 환수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 구축에 기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한겨레신문, 2006. 9. 16).

한겨레신문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합의가 현 정권의 반미 노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이 미사일 문제와 북핵문제에 있어 이견만을 보여준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20%에 못 미치는 사실을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이 전작권을 서둘러 넘기기로 방침을 정한 배경 중 하나에는 이 정권의 반미장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주와 반미를 외치던 이 정권 사람들과 그 외곽 지원 세력들은 전 국방장관들과 창군 원로, 전 외교부장·차관, 대학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나라 걱정하는 소리는 ‘수구세력의 책동’으로 몰면서 어제까지 악의 화신인 양 공격하던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은 복음으로 떠받들겠다는 것이다. 여중생 사건으로 2년 넘게 촛불 시위를 벌이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외치면서 무법천지를 연출했던 이들의 이런 갑작스런 표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들이 끌고 가는 이 나라의 내일을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 전체 국민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통령 지지세력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걱정하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이 정권은 한미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선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군사동맹을 서서히 허물어가는 데는 50년 동맹이 이구동성을 내놓은 현재의 상황에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만의 ‘자주’라는 호사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유도되지 않는 미사일의 궤적만큼 불안정한 북한의 행동과 엮고 아래 시달려야 할 국민으로서, 당장 내일과 내달과 내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조선일보, 2006. 9. 16).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와 관련된 담론투쟁에 있어 조선일보는 줄곧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력과 도덕성을 폄하하는 전략을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역대 외교, 국방 장관의 주장들을 논거로 제시했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일보는 한미군사동맹 강화를 국익과 동일시하는 담론투쟁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반대라는 정파적 주장을 한미동맹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대중적 이익과 연관시키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 및 노무현 정부를 무능하고, 비 도덕적이며,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것으로 규정하여, 국익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줄곧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분석기간 동안 한겨레신문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사설을 실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대신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sup>4)</sup>

## 2. 북핵위기와 담론투쟁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모든 언론보도가 북핵문제에 집중됐다. 북핵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조선일보는 기존의 논조를 강화하여 담론투쟁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한겨레신문은 논조를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조선일보는 북핵 사태를 처음 보도한 2006년 10월 10일 3개 사설 모두 북핵관련 이슈를 취급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결단율'에서 조선일보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북핵위기 해결의 대안으로 김대중 정부 이래 유지되어왔던 정책기조인 '햇볕정책' 이 북핵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북한 핵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설에서는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덧붙였다.

4) 한겨레신문은 북핵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무려 5차례나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실었다. 미국, 6자 회담 재개에 집중해야 (한겨레신문, 2006. 9. 8), 6자 회담 외엔 대안 없다(한겨레신문, 2006. 9. 13), 6자회담·작통권에서 한목소리 낸 한-미 정상회담(한겨레신문, 2006. 9. 16), 다시 한국 역할에 눈 쏘리는 '9·19 한돌'(한겨레신문, 2006. 9. 19),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박차 가해야(한겨레신문, 2006. 10. 3).

대한민국은 오늘 이후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게 됐다. 대한민국은 북핵 앞에 벌거벗은 무력한 처지다. 북한의 핵 공갈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밖에 없다. 이 정권이 지난 3년 반 동안 줄기 차게 흔들고 외쳐댄 자주의 깃발과 '우리 민족끼리' 구호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 그러나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 미국은 과거의 그 동맹국이 아니다. 이 정권 아래서 동맹의 쇠줄은 녹슬 만큼 녹슬고 동맹의 벽은 금 갈 만큼 금 갔다. 이 상황에서 도 이 정권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북의 핵실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대통령 말에 따라 전작권 단독행사를 계속 밀어붙여 갈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맨몸으로 북핵과 부딪치게 만들 것인가. 이 정권은 그것부터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이어지는 사설에서는 북핵 사태가 몰고 올 경제적인 충격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 핵실험 충격으로 인해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등이 우려되며, 이와 같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한미 공조를 확고히 해서 국가 신용도 추락을 예방하는 길 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조선일보, 2006. 10. 10).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핵실험 오판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갈 데까지 가보자' 식의 오판이라고 규정하고 개별국 차원의 선부른 대응보다는 국제사회의 중지를 모으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사설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 관계를 전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우선 돌발적 행동으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개별국 차원의 선부른 대응보다는 국제사회의 중지를 모아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이유다. 특히 1·2차 북핵 위기 때와 같은 북한 공격론이 미국이나 일본 안에서 무책임하게 거론되지 않도록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 북한 핵문제는 결국 외교적·평화적인 방법으로 풀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오판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하더라도 북한 역시 다른 나라와의 무력대결을 바라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기상조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남북 관계가 과거와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급격한 위축은 무조건적인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특히 남북 경협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줄이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데 필수적이다. 꿩기는 쉬우나 다시 구축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남북 관계다(한겨레신문, 2006. 10. 10).

두 신문의 북한 핵실험 관련 사설은 엄청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가

북핵위기를 군사적·경제적 위기가 복합된 포괄적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한겨레신문은 동북아 긴장관계 고조, 북한 핵시설 공격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핵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도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를 북핵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오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북핵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기존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과 한미 동맹 강화를 한겨레신문은 기존 대북정책 유지 및 6자 회담을 통한 포괄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 다음 날부터 한편으로는 진보세력들을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군 원로, 보수세력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자신들의 북핵위기에 대한 자신들의 논조를 강화해 나갔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북핵 평화해결, 북핵을 둘러싼 정쟁 지양 등을 내 세우면서 자신들의 논조를 구체화시켰다.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에 나타난 담론투쟁의 양상들을 몇가지 항목을 통해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복수의 국익

북핵사태 이후 신문들이 보도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국익 관점을 나타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보수 신문들은 “북한 제재”와 “한미동맹 강화”를 국익과 연결시켰고, 진보적인 한겨레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일보는 국익을 ‘한미 동맹 강화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한겨레신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국익으로 규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자체 간행물의 論壇논단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정책보다 한미공조를 굳게 하는 것이 투자심리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10월 18일 사설)

‘야당 등이 대북 포용정책의 파탄을 주장하며 강경물이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정권의 성격과 대북 접근 방식을 두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지금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뭔지 고민하고 행동을 절제할 때다. 일단 한반도 위기가 시작되면 사태 수습이 아주 어려워진다. 대화의 동력을 키워 6자 회담 재개 실마리를 찾는 일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한겨레 10월 5일자 사설)

### 2) 북핵사태의 원인과 희생양 기제

사회는 갈등과 이견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안의 본질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원인을 분석해 내고,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는 단기간에 쉽사리 문제의 원인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원인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면 단기간에 해결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 여론이 갈등적 사안에 대해서, 특히 첨예한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원인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언론은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상태에서 입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원인을 찾아내 너무 쉽게 보도하곤 한다.

더욱 큰 문제는 한 사회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원인을 통제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엉뚱하고 억울한 원인, 즉 희생양을 찾는 기제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보도의 경우가 상당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핵 실험을 했는가에 대한 동기와 근본적인 원인은 쉽게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추측과 근거없는 단정을 내리기가 쉽다. 또한 핵실험을 감행한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북한이고, 그런만큼 당연히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북한에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법이 여의치 않고, 방법이 있다해도 효과적인 책임추궁이 될지 의문이다. 이럴 때 언론들은 북핵문제의 책임을 엉뚱하게 남한정부 또는 미국으로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북 포용정책과 대북 햇볕정책의 受惠者수혜자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권력집단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이 “북한이 햇볕정책 때문에 핵개발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조선일보 10월 12일).

북한은 도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한겨레 10월 10일)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는 북한을 포용하지 않고 강경하게 몰아붙인 부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탓도 크다고 진단하고 있지 않은가. (한겨레 10월 12일 사설)

### 3) 국익보도의 정파성: 공격 저널리즘

북핵 문제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많은 사안일수록 언론보도에 요구되는 것은 갈등적 의견을 이성과 합리, 그리고 객관적으로 표출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이다.

한국 언론은 민주화 이후 스스로 정치권력화하면서 하나의 정치 제도가 되었다. 정치제도로서 한국 언론은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하면서 객관과 공정 보도의 영역을 넘어 정파적 편향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인다(최영재, 2005). 북핵 관

련에서도 언론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보도하면서 합리적 공론을 이끌어 내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언론이 정치적 해석을 하고 정치적 공방의 주체가 되어 버린다.

북핵 관련 보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도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공격과 비방, 선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은 사회내 갈등을 보도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등의 부추기는 주체가 돼버렸다.

‘결국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역설적으로 사상적 좌파인 듯이 행세해온 이 땅의 좌파 단체와 그 소속원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이고 사실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져온 세습독재 체제의 동조자 또는 하수인이라는 것을 폭로해 버린 셈이다.’ (조선일보 10월 11자 사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금강산 파이팅’ 구호나 외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나라를 지킬 의사도 역량도 없다는 증거일 뿐이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 집권당은 안보야 결판나건 말건 10%를 오르내리는 정권 지지층에게 “햇볕정책은 지키겠다”는 메시지만 전달하면 된다는 ‘大選대선정치’에 넋이 완전히 빠져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 10월 18일 사설)

‘하긴 지금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지 모를 좌파 단체들은 “미국 들러리로 전락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제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뿌려대고 있긴 하다. (조선일보 10월 13일 사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철부지 386처럼 “북한이 핵무장한다고 별일 있나. 통일되면 그것도 우리 무기인데...”라고 솔직히 털어놓는 편이 낫겠다. (조선일보 10월 13일 사설)

## V. 결론 및 논의

북핵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부의 위협 요소로 인해 국내 구성원들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위협을 회피하고 위기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정파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뉴스가 전해진 초반부에는 정부의 대응자세와 언론의 보도가 일치를 보이면서 잠시지만 오랜만의 화합의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해묵은 사회 내 정파적 균열과 정부와 언론의 적대적 관계는 오래지 않아 외부의 충격으로 촉발된 내부 갈등을 더욱 골깊고 혼란스런 갈등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치권력의 리더십도 문제이지만, 언론의 정파적 편향과 공격 보도는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켜 국익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담론투쟁에서 정부는 언론이나 일 반적인 사회세력들과는 전혀 상이한 위치에 서 있다. 정부는 담론투쟁의 행위주체 이지만, 공식적 담론을 통해 사회세력들의 담론들을 포섭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의 작동기제가 제대로 발동하고 있 지 않은 상태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참고 문헌〉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5), 319~348.
- 강민 · 김옥경. 2003. 국가의 변혁능력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헤게모니 담론, 전략관계, 그리고 구조적 맥락.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1호. 47-66.
- 조희연 (편). 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 책
- 최영재. 2006. 언론의 편향성과 신뢰 분열: 황우석 논문 조작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신뢰연구 제16권. 21-47.
- 최영재. 2005. 언론의 정파성과 대통령 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언론과 법》 4(2). 49~80. 20051230.
- 홍성구. 2004. 코포라티즘적 계급정치와 언론보도: 정리해고제의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권 4호. 3-33.
- Jessop, B. 1982. *The capitalist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Jessop, B. 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Cambridge. Polity Press. 유범상 · 김문귀 (역) (2000). 『전략적 국가이론: 국가의 제자리찾기』. 서울: 한울 아카데미.
- Herman. E. 1995. Media in the U.S. Political Economy. J. Downing et al. (ed). *Questioning the media*. London; SAGE
- Kleahn, J. 2002. A critical review and assessment of Herman and Chomsky's propaganda model.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7(2). 147-182.
- Hall, S. et al. 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order*.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 Urry, J. 1983. *The anatomy of capitalist societies: The economy, civil society and the state*. The Macmillan Press LTD.

## Media's Coverage of North Korea Nuclear Issue and National Interest

*Choi, Young Jae / Hong, Seung-Ku*

The news of North Korea nuclear crisis, Oct 9, 2006, has exposed, in a sense, the problematic partisan bias in Korean press. Conventional wisdom says that a national crises, if it originated from the outside, tend to alleviate conflicts inside the nation. The things in Korea, however, have gone to the contrary.

The current project attempted to address how national-interest discourse surrounding North Korea nuclear crisis has unfold by analyzing national newspapers' coverage of the issue.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and the liberal Hankyoreh.

The analysis, first of all, uncovered the difference in the definition by the two liberal and conservative of national interest embeded in the nuclear crisis. The conservative newspaper took up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strenthening of Korea-U.S tie for national interest, whereas the liberal paper supported for a solution through dialog to enhance national interest. The two newspapers brought up different sources of the crisis such that the conservative blamed South Korean government, while the liberal paper criticized the U.S. The diverged definition, cause and solution finding by the news media facing the same national crises perhap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since the democratization period in the late 1980s, the press has become political forces by relying on partisan bias reporting strategies.

The major newspaper in Korea has been politicized by themselves in the process of covering political issues in the unabashingly biased way, attacking their political counterparts, such as political parties and the other politically skewed media. Under the politically biased media environments in which national interest issues are discussed, national crises tend to lead the nation into the trap of internal conflicts.

**Key words:** national interest, North Korea nuclear, partisan press, discourse struggle, state power, hegemony